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육의 방향 변화와 전망

Yoon Seok-yeol Government's Direction & Prospects Change of Unification Education in South Korea

박 찬 석*

Chan Seok Park

국문요약

분단 사회의 불확실성은 더욱 분단을 증폭하고 확산하고 있다. 특히 보수 세력들은 통일교육의 ‘사회적 성찰성’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정부도 더 의연하게 보수 세력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경청도 필요하다. 그러한 경청과 소통 속에서 통일교육은 학생들에게 함께 사회 연대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될 것이다. 학교 및 사회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단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사회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원동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통일교육은 ‘사회적 성찰성’을 실천하여야 한다. 그 실천은 학생들에게 통일의지를 담은 남북갈등 해소에 대한 호소력을 갖도록 하는 통일교육을 구현하는 것이다.

분명 통일 실천은 시민적 결단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힘들고 귀찮은 교육과정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은 시민을 교육하는 길이기, 진행했던 교육에 있어서 반론을 할 내용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입장에서 어렵지만 민주시민교육은 남북한, 한반도 주변의 갈등

<http://doi.org/10.56475/ygsr.2023.28.1.113>

논문투고일 : 2023.04.21. 논문심사일 : 2023.05.16. 게재확정일 : 2023.05.30.

*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E-mail: pckmy@gjue.ac.kr)

Professor,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국내외적 환경을 파악하여야 한다.

주제어: 통일교육, 시민교육, 사회적 성찰성, 분단, 남남갈등 해소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통일교육의 변화 | |
| III.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육 내용
진척의 필요성 | |

I. 서론

현대 한국 사회는 아직도 보수와 진보 갈등이 심각한 갈등 속에서 살고 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상황을 거치면서도 대한민국 사회는 매우 갈등적 요소의 좌, 우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교육은 긍정성과 부정성을 잘 인식하고 오늘의 좌우 갈등의 문제를 파악하며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국가가 통일교육 정책의 진행과정에서 보다 진지한 보수와 진보의 시민적 논의를 생략한다면, 남남갈등의 고조로 인하여 남북의 화해 무드는 국한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각자는 근본적으로 통일, 시민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여야 하며,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언사를 피하고 비전 있는 통일실천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질적 통일로 향한 민주적 인식과 실천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개인에게서나 집단적으로 인식하고 지향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입장이 취약하게 접근되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통일 민주주의의 선택에 중대한 민주적 인식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전개되어 온 분단 사회의 모순은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제시하고 갈등의 딜레마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모순 덩어리가 분단 사회로의 기조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취지에서 통일교육은 분명 방향을 변화시켜야 한다.

통일교육은 아직도 6·25전쟁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인 남남갈등, 남북갈등의 통합적인 인식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북한의 다양한 외교적 방향과 경로 속에서 오도된 인식의 확산으로 국민들은 통일 문제에 대한 자제력을 잃고 극단적 국수주의나 극단적 애국주의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면 극단적 보수 세력들은 극단적 반북 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주의적 입장이 통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통일은 인내심을 갖고 대북 안보 능력 배양과 더불어 대북 평화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시민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여도, 시민적 자질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중북 논리나 반공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대북 인식과 대미 인식에 있어서 민주적 인식을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바로 우리 내부에서 반북 의식이 매우 극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 합리성을 갖추고 극단적 보수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진보나 보수 진영 역시 이데올로기적 기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 사이 속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통일 및 북한 인식의 인내력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전개되지 못하면, 우리 통일교육 학계는

통일과 북한 이해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학생들을 키워 나가야할 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즉 분단 현실을 고민하는 ‘사회적 성찰성(social reflectivity)’이 국민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강화하는 기준점에는 정부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정부가 시민의 육성에 대해 더욱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¹⁾

분단 사회의 불확실성은 더욱 분단을 증폭하고 확산하고 있다. 특히 보수 세력들은 통일교육의 ‘사회적 성찰성’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정부도 더 의연하게 보수 세력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경청도 필요하다. 그러한 경청과 소통 속에서 통일교육은 학생들에게 함께 사회 연대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될 것이다. 학교 및 사회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단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사회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원동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통일교육은 ‘사회적 성찰성’을 실천하여야 한다. 그 실천은 학생들에게 통일의지 강화와 남남갈등 해소에 대한 호소력을 갖도록 하는 통일교육을 구현하는 것이다.

분명 통일 실천은 시민적 결단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힘들고 귀찮은 교육과정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은 시민을 교육하는 길이기애, 진행했던 교육에 있어서 반론을 할 내용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입장에서 어렵지만 민주시민교육은 남북한, 한반도 주변의 갈등 국내외적 환경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의 지속적 관심을 통해 통일교육의 방향과 전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도

1) 유홍립(2005), 『현대 사회의 특성과 정치의 역할』, 『현대 정치의 이해』, 인간사랑, 18쪽.

시민에게 요구만 하지 말고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인내력을 길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육은 보수와 진보의 융합적 실천을 도모하는 것이다. 오늘의 ‘사회적 성찰성’을 강화하는 목적은 분단으로 제조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다양한 민주 사회 속에서 분단 갈등 문제는 확산을 막는 것이다. 분출되는 대북 갈등과 남북 갈등을 잘 잡아내며 궁극적으로 평화교육, 인간안보교육, 시민교육적 지향과 다문화적 상황 반영을 통일교육을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II. 통일교육의 변화

앞으로 통일교육은 분단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통일 및 시민 교육 프로그램이 평화교육적 접근, 인간 안보적 접근, 시민교육적 접근, 다문화교육적 접근으로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분단에 대한 인식과 문제에 대한 제조된 불확실성을 파악하고 극복할 수 있는 통일 논의의 올바른 지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통일교육의 평화교육적 접근

통일교육은 반공교육의 적대적 북한인식에서 벗어나 통일교육의 사회 통합적 북한인식으로 변화해 왔다. 앞으로 통일교육은 평화교육의 목표와 내용구성으로 발전하여 가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통일교육은 반공교육 → 통일안보교육 → 평화 통일교육 → 통일교육으로의 변화하여 왔다. 통일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시대의 상황 속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교육목표와

내용의 구체성을 가지고 나타나야 한다.²⁾ 그러나 통일교육이 반공교육으로 치달던 그 입장이 줄어들지 않고 확대되고 또한 통일 안보교육으로 강화된 자체로 전환되고 오늘에 이르렀다. 평화통일교육으로 전환된 통일교육은 안보교육에 의해 강화되었다. 전형적으로 통일교육은 안보와 평화가 극단화되는 입장으로 강화되면서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비극적인 갈등을 보이고 있다. 아스팔트의 보수와 진보는 상당한 위협적인 입장을 버리지 않고 통일교육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평화로운 사회로 지향은 평화를 도구로 하는 평화 분위기를 교실과 사회 환경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지금의 통일안보 교육도 반공 및 반북 교육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북 논쟁’에서 한국 사회가 유연해져야 한다.³⁾ 우리 사회는 수없이 많은 종북 논리에 정치계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 우파들이 갖는 ‘종북논리’에 대한 집착은 이후 ‘평화논의’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 즉 국내환경의 조건이 계속 개방적이며, 합리적인 입장을 갖게 되면, 평화적 논의를 갖는 통일교육이 그동안 대립적이었던 보수와 진보적 논리를 이해하며 포용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에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집권당에서 추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짜 뉴스에 늘 젖어 있는 분단 이후 한국 사회가 올바른 통일 의지를 가지려면 통일 미래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되는 통일정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2) 고정식·길은배·김용재·고성호 외(2004), 『통일지향 교육 페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통일연구원, 35-36쪽.

3) 조한범 외(2014), 『지속가능한 통일론의 모색』, 한울아카데미, 179-180쪽.

북한의 입장을 따른다고 해서 종북논리라고 하면, 역으로 미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을 따르는 것은 종미논리, 종일논리라고 하겠다. 따라서 분단이 가져다 준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평화를 강화하는 의지를 통일교육은 강조하여야 한다.

그래야 통일교육은 새로운 사회적 화합과 평화적 공존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질 것이다. 통일로 향하는 편린을 평화적 논의 속에서 재구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에 보였던 남북 대결 입장을 극복하면서,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수 주도의 통일논의를 보다 평화적으로 포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제 우경화된 보수적 여론은 평화주의적 논의로 반복적인 입장을 극복하여야 한다. 분단 극복을 중시하는 사회 통합 노력이 정부와 언론에서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육은 보수 세력의 논리나 변형세력의 논리 양자를 승화하는 ‘평화적 공존 사회의 통일교육’을 내놓아야 한다. 분명 통일교육은 복합적인 인식의 안목에서의 평화 지속적인 교육목표와 내용이 상정되어야 한다. 즉 국가 내부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해 통합되는 의지가 보인다면, 통일교육은 평화적 통일의를 강화하는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통일교육을 위해 모든 통일교육 관계자들은 평화지향적 리더십, 통일 민간단체의 의견, 평화적 시민의 견해를 총체적으로 결집하여야 한다. 한국의 통일역량은 평화를 강화하는데 그 기초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분단의 지난한 민족 역사에서 진척된 반감을 줄어내는 교육이다. 이제 통일교육 전문가들은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북한 상황에 대해 다원적으로 파악 성찰해야 하는 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야의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심을 잡고 우리 민족의 통일로 가는 길을 어떻게 건전하고 나아가 하는지를 고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뜻을 모아 정부는 사회 통합의 길을 평화적으로 인식하고 접근하여야 한다.

2. 통일교육의 인간 안보적 접근

통일교육에서 안보교육이 갈등 완화가 가능한 한국 사회로의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은 그 동안 보수 정부의 안보교육에서 다양한 비판과 대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보수 정부의 ‘안보확장’, ‘중북논리’를 퇴치하는 노력은 안보교육이 주어진 그동안 분단을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극단적인 반공주의와 애국주의의 국가 안보교육은 한계를 파악하고 재정립하여야 한다.

물론 국가 안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국가 안보의 용어로 남북한의 분단 상황을 극복할 수는 없다. 특히 남한의 한미일 동맹의 최고치를 갱신하는 상황에서 국가 정서를 감안한 안보의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그러한 입장의 전개는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1994년판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처음 쓴 용어인 인간 안보적 입장이 요청된다. 즉 개인적인 삶과 지속가능한 분단의 안정적인 생태로의 국가 안보가 갖추어 져야 할 것이다.⁴⁾ 즉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은 인간 안보의 주장처럼 소극적 평화 개념인 국가안보를 넘어선 적극적 평화개념을 접근하여야 한다.

통일교육에서 인간 안보를 강조하려는 것은 바로 극단적인

4) 이나미(2021), 『여성 및 생태 분야의 통일담론 회고와 성찰』, 『분단 이후 제기된 통일담론에 대한 정리와 성찰』, 통일부 통일교육원, 338쪽.

국가안보가 남북한이 분쟁을 자초하는 경우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인간안보 개념은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과거 냉전시대에 국가안보로 좁게 해석되던 안보 개념이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강조한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국가안보를 강조하다보면 국가안보적 측면에 사로잡힌 정부가 반민주적인 국가의 북한에 대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다. 한 마디로 편집증적인 분단의 마음이 소소한 인간적인 상황까지 고려한 국가 안보가 자리를 잡았다.⁵⁾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파편화된 마음을 중심으로 한 안보 개념을 보다 확연하게 한반도 상황은 지나친 국가안보의 충돌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강력한 국가 안보의 응집에서 벗어나 생태적으로 삶을 지속하는 해결 가능한 인간 안보적 삶에서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간안보를 강조하는 통일교육은 갈등이 혼재되어 온 분단 시대에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입장을 강조하는 논리이다. 즉 인간안보의 통일교육은 평화와 안보, 군축과 비핵화, 생태계 보전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동의한다. 즉 인간안보는 실제로 인권보호, 여성권 향상, 지구오염 방지, 핵확산 금지 등 관련 관심사를 해결하려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인간 안보적 차원의 통일교육은 보다 안전한 지구를 만들기에 스스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노력하는 경우를 지향한다. 이제 지구촌은 어떤 안전지대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았으며 질병, 가난, 핵무기, 환경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아무 곳도 없다. 이러한 위협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지구촌의 단결과 더불어 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즉 개개인이 자서전적인 추이를 통해

5) 이형중(2020), 『분단의 마음에 대한 심리적 조명 연구: 혐오 정동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제2호, 256-257쪽.

통일교육을 파악하면서 전적인 분단 극복을 위한 문해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강화되는 국민 의식, 민중 의식, 대중 의식을 뛰어 넘기 위한 시민 전환으로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통일교육과 인간 안보교육을 잘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인간 안보를 조성하는 통일교육은 통일 인성을 강화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분단과 갈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사회적 성찰성을 부응하려면 각각의 시대적 논의 속에서 개개인의 인권과 안보가 잘 구성되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도 중요하지만 갈등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극복하는 작업은 인간 안보적 섬세성에서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교육의 내용에 인간 안보교육이 전개된다면, 일상적인 생태적 삶과 통일 지향 논리들에 대해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안보가 주는 실제적인 안전 논리들이 보다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 식량, 보건, 환경, 자유를 통한 실제적으로 올바른 인간 안보의 방향에서 안보 논의의 풍성화를 이룰 것이다.⁶⁾ 즉 인간안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속에서 통일교육은 통일과 안보의 융합적 논의를 더 많이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인간안보의 교육적 프로그램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을 강화할 것이다.

3. 통일교육의 시민교육적 접근

통일교육은 분단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어떻게 교육적으로 통일 지향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가를 판단하는 교육이다. 통일교육

6)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2022), 『한반도평화이해』,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79쪽.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시민들이 고민하는 분단 갈등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필요하다. 일단 통일 정의와 사회 통합은 계속적으로 분단 현실의 불확실성을 주시하고 통일교육과 시민교육의 ‘사회적 성찰성’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과 시민교육의 보다 자율성을 함양하며, 다양한 의견을 갖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 사회 그리고 시민 공동체가 상호 노력한다면, 현재의 세대 간의 문제, 노사 간의 갈등, 사회 안의 갈등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해결 방안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통일교육은 보수나 진보가 분단갈등과 문제 인식 그리고 해소 방안을 찾아 ‘평화 수행 역량’을 제시하고 구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⁷⁾ 시민들이 고민하는 통일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시민교육의 실천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우리의 민주 사회는 기존의 평화와 안보, 올바른 통일지향적 가치를 융합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국가를 이루는 자유적 시민의 실현화이다. 모든 우리 사회의 시민들은 스스로 자유의 실체화를 실현하게 하는 지향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자기완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통일교육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자기완성과 개인의 욕구를 실현시켜 주는 민주적인 시민 정신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담론을 가능하게 하는 평등한 사회 구성원인 시민의 실현이다. 시민은 참여자이며, 사회 문제의 통합적 현실성을 추구하는

7) 박찬석(2022), 「한반도 통일교육의 전개와 실천 방안」, 『통일교육연구』, 제19권 제1호, 94-95쪽.

적극적인 삶의 추구자이다. 분명히 ‘보수적 시민교육’이던 ‘진보적 시민교육’이던 사회 개혁은 시민의 평등한 참여로 구축하여야 한다. 즉 정부, 민간 그리고 사회 안에서 민주적 가치가 심화되면서 민주적으로 변화를 추진하는 인간관계에서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궁극적으로 통일교육과 시민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발전된 복지사회의 실현이다. 복지민주사회는 경제적인 형평이 균등하게 이룩함으로써 경제적인 나태나 원망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을 가능하게 하는 이념적 무장은 통일교육에서 말하는 통일과 시민교육에서 말하는 민주이다. 적어도 개별적인 욕구로 인해 분단의식을 갖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개별적인 빈곤이나 박탈감을 극복한 통일 인식이나 민주적 입장의 강화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담론 속에서 가능하여야 한다. 통일 없는 민주는 과격한 극단주의자들의 준동을 막지 못하며 민주 없는 통일은 비극적인 우민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통일과 민주 부재는 한국 시민을 억압하는 기제이다. 한편의 민주는 통일 지향으로 가기 위한 열정적인 사회 개혁적 통일교육이 진척되어야 한다.

넷째, 진정으로 통일교육과 시민교육이 추구하는 바는 평화구축을 통한 지방, 국가, 세계로의 지향이다. 우리는 민주 사회적 입장을 추구하면서 사회가 민주적 통일 지향적 공동체를 개방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양한 시민적 논의의 재결합에 대한 논의는 통일 시민을 강화하는 이론적 변화와 관점을 가져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일상적으로 통일에 대한 의사소통과 통일교육적 의미를 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 구성원에게 남북 통일 남북 평화를 찾아나가려는 정부가 노력한다면 파생적으로 드러난 파편화된 통일논리는 시민사회에서 다시 일상적으로 통일 지향적 삶의

긍정성을 보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전개될 수 있다.

4. 통일교육의 다문화적 교육적 접근

우리나라로 이주한 다양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자기 삶의 결정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이다. 시민교육의 입장에서 통일 문제는 열린 민족주의,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열린 민족주의와 열린사회로의 시민교육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양극화된 남북한의 통일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적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⁸⁾ 여기서 한 차원 높은 다양한 삶의 평화공존의식이 요청된다. 예를 들자면, 남북한 갈등을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 의식은 우리 내부의 분단 의식과 혐북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남북관계의 갈등 상황을 가감없이 우리 사회의 다각적인 평화관으로 해석될 수 있음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통일교육은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는 다문화 사회에서 각자의 평화에 대한 인식 정립이 중요함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공동선은 올바른 현실 파악과 평화 통일 관점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통일교육은 다문화적 상황을 접근하는 객관적 인식을

8) 임현진·정영철(2005),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 서울대학교출판부, 279쪽. 사회문화적 통합은 지난한 남북 구성원들의 심리적·정서적 동일성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통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혁신적인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통합적인 정책과 논의가 여야를 막론하고 수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진척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공이산의 정책이 아닌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남북한의 상황이고 동북아의 상황인 것이다.

고취하는 노력이 이루어야 한다. 다문화적 사회를 향해 접근한 통일 교육은 사회적 자율성 및 시민 의식실천의 생활화,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에 대한 인식 내면화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 정권에 대한 반발을 북한 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실천적인 다문화 사회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은 다양한 사고를 갖는 서로 다른 사람들 간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적 민주주의 및 참여의식이 이루어지면 지나친 ‘종북논리’나 ‘혐북의식’은 갈등 해소를 시도하는 차이를 인정하는 다문화적 평화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문화 민주 의식은 통일 문제 접근에 있어서도 다양한 평화를 지향하는 다문화적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통일교육은 통합적이며 이성적인 통일관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가 현재 지향한 통일관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건전한 안보관과 민족 공동체 의식으로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려는 자세를 배양하는 것이다.

미래지향적 통일교육과 다문화 교육의 결합은 실질적으로 남남 갈등, 남북 갈등의 가능성을 줄이는 일을 다루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민주적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추진한 통일교육은 민족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양한 민주적 논의를 활성화하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21세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분단 상황 극복을 위한 대안이 장기적으로 기획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통치권을 갖는 정부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공동체 통합에 있어서도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주의 실천의 한 시민이 통일과 민주, 민족주의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취하는 논의들을 전개하고자 한다. 구성원들의 입장이 수용

되거나 수용당하는 것이 민주적 논의에서는 늘 가능할 수 있다는 논의를 전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는 실질적인 보수와 진보의 의사소통의 내용성을 담고자 한다.

통일교육에 있어서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은 올바른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통일교육은 진정한 의미의 민족 통합의 차원을 뛰어 넘는 현재 한반도에 살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적 삶을 보장하는 시민적 노력의 통합교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적 시민교육의 기초는 우리 내부의 문제로 국한 하는 것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과 단체 그리고 개인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노력이다. 이러한 중요한 논의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민주적 실천에서 구현되는 사고와 행동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Ⅲ.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육 내용 진척의 필요성

분명 2020년대 중반 이후 한반도의 상황은 신냉전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러한 고압적인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은 이제는 올바른 국제환경인식과 남북한 관계의 이해를 기초로 하는 통일교육을 접근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우리의 통일교육은 ‘창조적 파괴’를 지양하면서 동시에 ‘평화의 창조’를 이루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일교육이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을 향한 각자의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남남갈등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충분히 알리는 지북(知北)적 논의와 비판적으로 인식하려는 비북(批北)의 논의가 서로 교류 발전하는

공존이 이루어져야 한다.⁹⁾ 이 속에서 통일교육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좌, 우의 이념적 정착이 이루어지면서 평화적 한반도 구상이 견지될 수 있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 어울리는 통일교육이 보다 잘 실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현장에서 보다 분명한 비전과 대안을 갖게 될 것이다.¹⁰⁾ 이러한 비전과 대안의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교육은 평화적 논의에서 갈등 조장보다는 일상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전개하여야 한다. 평화적 논의는 전쟁을 반대하는 동시에 전쟁을 대비하는 안보적 성격도 포함하여 실천되어야 한다. 즉, 통일교육은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을 중요하며 적극적인 안보 인식의 실천도 병행해야 한다. 그 근거는 남북한 대치 상황에 북한에 대해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평화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 변화에 따라 좌우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평화적 통일교육은 북한 이해와 북한에 대한 비판적 인식 사이에서 통일 비전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오늘의 MZ 세대인 학생, 청소년들의 북한관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통일교육은 국내외적인 상황인식, 북한의 변화와 현실 그리고 우리의 여건이나 남남갈등의 갈등 요소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비판적 북한 인식으로의 확산을 막고, 객관적 북한 인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일방적으로 반복 및 중복 확산은 갈등적 요소를 보다 명확하게 전개하여야 한다. 통일교육은

9) 임현진·정영철(2005),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 서울대학교출판부, 276쪽.

10) 김창현(2004.1), 『통일교육 지침 총론 및 학교통일교육의 과제』, 『통일교육발전 워크샵 자료집』, 213-228쪽.

북한을 제대로 아는 지북(知北)의 입장일 필요하다. 지나치게 북한 특수성에 얽매이는 논리들은 극복되고, 반북(反北)논리를 지북논리로 전개하여 북한 관리의 입장을 보다 잘 견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인간안보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은 안보에 대한 구성원들의 조화와 공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여야 한다. 남남갈등의 원인은 대북관, 안보관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한 차이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 안보관의 실현이라고 보는 보수적 입장과 그에 대항하는 온건한 방안을 찾는 진보적 입장이 갈등한다. 보수 세력이나 진보세력들은 국가 안보에 대해 기본적으로 강력한 안보적 입장을 갖고 있음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적 관심을 갖는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반감을 갖고 통일교육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배려와 책임을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보수 진보의 상호 인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통일교육은 맹목적인 대북 인식, 남남 갈등 인식을 극복하는 교육이다. 또한 현재까지 이를 전개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통일교육이 맹목성과 갈등 완화를 찾아야 할 것이다. 보수 정부가 솔선하여 다양한 구성원들의 요구와 배려와 관심 역시 더욱 구체적으로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전개해 나가야 한다.

셋째,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시민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여야 한다. 민주 시민들은 통일문제나 북한이해에 있어서 학교나 사회의 갈등 요소를 비판적으로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민성을 포용하는 문제 속에서 통일교육이 거듭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은 학교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남남갈등 및 남북 갈등문제에 있어서도 안보적 해결이 온건적 방법과 강경한 방법에서도

통용되는 구체적 실천임을 파악해 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교실이나 현장에서의 자율적 의사소통, 왕따 극복 및 인권 문제에 대해 개선을 기초로 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¹¹⁾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통일의 지향은 보편적, 거시적, 개방적 입장에서 우리 사회 및 남북한 사회에서 통일지향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지향은 분명 통일은 모든 방면에서 한반도 구성원들이 가지는 삶의 정신과 현실을 공유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IV. 결론

시민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근원을 두고 있다. 시민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되면서 더욱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1980년 이후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우리의 경우에도 시민들의 논의가 요구된다. 한마디로 시민사회는 시민교육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봄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일련의 사태에서 시민들의 행동은 매우 중요한 정치 행위로 보여 진다. 촛불과 맞불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 시민사회는 화답해야 하며 정치권은 그에 대한 문제 해결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것이 시민사회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단서이다.

특히 선진국의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참여민주주의에서 발전해 왔다. 시민들은 다수결 원리와 정당 정치의

11) 광병선·이종태·김재춘·김두정(1998), 『통일대비 교육과정 개발방안 연구』, 『한국 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98-37』, 19-20쪽.

한계를 보완하면서 협치, 가버넌스의 방식을 강화하여 왔다.¹²⁾

이러한 전반적인 관점에서 통일교육 문제에 있어서 시민이 중요한 이유는 극단적인 정부의 실패일 경우, 시장의 실패일 경우에도 제3의 대안으로 시민사회의 건재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 2023년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덕성이 작동되기에는 정부의 실패가 국가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나 시장의 폭력은 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에서도 늘 악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한 입장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에게 시민적인 태도와 억압당하는 국민정서를 유연하게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통일교육은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통일시민 정서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이다. 그러한 통일교육 정서는 중복 프레임, 심지어는 이데올로기 문제로 비화하여 참여적 시민 역할을 방해하는 경우를 줄여 나가야 한다.

정부가 실패했어도 정부가 실패하지 않았음을 계속 건전한 통일 교육을 통해 진행한다면 국민들이 평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부는 통일교육에 있어서 ‘중복논리’나 ‘반복정서’를 극복하고 민주적 시민의 자정능력을 앞세워 평화주의, 인간안보, 시민교육 그리고 다문화적 사고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논의가 전개된 통일교육은 앞으로 보다 의미 있는 변화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통일교육은 시민적 논의를 강화하는 입장에서 시기적 특성에 맞게 강화되어야 한다. 즉 통일교육은 각 시기의 특성을

12) 심성보(2014), 『민주시민을 위한 도덕교육』, 살림터, 350-381쪽.

포괄하는 중요한 국가적 통일이념을 실천하려는 지속적 교육목표를 실현하여야 한다. 앞으로 통일교육의 지속성은 인간안보와 사회통합의 민주주의, 평화주의, 다문화 주의를 실천하려는 교육목표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입장의 강화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적 의사진행이나 주장을 전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국민들은 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번영을 위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제 정부는 일방적으로 통일운동을 해석하는 논리는 극복되고, 건설적인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지론을 정부의 개혁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정식 · 길은배 · 김용재 · 고성호 외(2004), 『통일지향 교육 페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통일연구원.
- 김창환(2004.1), 『통일교육 지침 총론 및 학교통일교육의 과제』, 통일부,
『2003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자료집』, 213-228.
- 박종철(1993.4), 『민족주의의 개념 및 한국민족주의의 특성』, 『통일이념
으로서의 민족주의』, 『민족통일연구원 개원 2주년 기념 국내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7-10.
- 박찬석(2022), 『한반도 통일교육의 전개와 실천 방안』, 『통일교육연구』,
19(1), 77-104.
- 심성보(2014), 『민주시민을 위한 도덕교육』, 살림터.
- 안병영(1998), 『세계화를 다시 생각하는 이유: 세계화의 신화와 그 극복』,
『계간사상』, 겨울호, 7-8.
- 오기성(2016), 『인문학으로 다가가는 통일교육』, 양성원.
- 유홍림(2005), 『현대 사회의 특성과 정치의 역할』, 『현대 정치의 이해』,
인간사랑.
- 이나미(2021), 『여성 및 생태 분야의 통일담론 회고와 성찰』, 통일부
통일교육원, 『분단 이후 제기된 통일담론에 대한 정리와 성찰』,
282-377.
- 이형중(2020), 『‘분단의 마음’에 대한 심리적 조명 연구: 혐오 정동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4(2),
237-261.
- 임현진 · 정영철(2005),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수복(2007), 『한국의 문화적 문법』, 생각의 나무.
- 조민(1994), 『한국민족주의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4-24』.
- 조한범 외(2014), 『지속가능한 통일론의 모색』, 한올아카데미.
- 차기벽(1990), 『민족주의원론』, 한길사.
- 추병완(2007),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한국인의 새로운 가치관』,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비 세미나 자료집』.
- 최현호(2003), 『남북한 민족통합론』, 형설출판사.
- 국립통일교육원(2002), 『한반도평화이해』,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 한배호(1992), 『정치변동과 국가·사회의 긴장관계』,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 Anthony Giddens, Nation State and Violence (Oxford: Blackwell,1985), 진덕규
옮김(1992), 『민족국가와 폭력』, 삼지원.
- Calton J. Hayes(1960), Nationalism: A Religion, New York: The Macmillan
Co., p. chapter v.

Yoon Seok–yeol Government’s Direction & Prospects Change of Unification Education in South Korea

Chan Seok Park*

Abstract

The government needs to be more resolute in recognizing the concerns of conservatives and listening to them. In such listening and communication, unification education will be an education that enables students to have social solidarity together. In order for schools and society to resolve conflicts, they must have the driving force to actively cope with the society of ‘uncertainty due to division’. From such a standpoint,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practice ‘social reflexivity’. The practice is to realize unification education that gives students appeal for resolving South-South conflicts that contain the will for unification.

Keyword: Citizenship, Unification Education, Civic Education, Social Reflexivity, Division, Resolution of South–South Conflicts

* Professor,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pckmy@gjue.ac.kr)